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8. 01. 22 <제21호>

CHINA WATCHING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과 한중 관계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정책 제언

달빛 3불(不) 정책 유지

- 2017년 10월 31일 한중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드 관련 3불 정책에 대해, 한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강조해서 준수유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이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북한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동맹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 그리고 그 대상은 대중국용은 결코 아니며,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을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 존재

2018년 사드 관련 환경평가 결과발표는 한중 혹은 한미 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사안이므로, 선부른 결론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점검한 후 결론을 내리는 태도 필요

중국 측과 외교안보 라인에서 공식적인 형식을 넘어, 보다 진일보한 전략 대화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권위를 부여한 1.5 혹은 1.7 트랙 차원의 전략대화 활성화
- 그간 중국 측이 금기시했던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대화도 시작할 필요 존재
-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동계획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

경제협력 강화와 '이익공동체' 형성을 통한 외교안보 협력의 강화방안 추진

- 중국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다양한 지역 전략구상을 접목하여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새로운 단계의 협력을 추진해야 함.
- "With China" 전략 방향을 제안함
- 환황해 지역협력 구상을 추진. 국가 간 협력을 넘은 "지역민 생존 이익"에 기초한 지역 이익공동체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전면적인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결미협중(結美協中)" 전략을 추진해야 함. 향후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중 관계 3원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 첫째, 상호존중하고, 소통과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
- 둘째, 공동 번영
- 셋째,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견인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결미협중(結美協中)" 전략을 추진해야 함.

대중 관계 3원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정상회담 결과

- 양국은 로우 키로 임하였으나, 상호 자제력을 보여주면서, 실리를 획득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드 관련 보복의 종결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명백한 신호를 발함
 - 상호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 확인
 - 북핵 문제 관련 4개 원칙에 합의
 - 한중 최고지도자 간의 핫라인 구축
 -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민의 마음을 획득, 시진핑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 증진
- 문제점
 - 사드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일시 봉합된 상황이며, 언젠든 한중 관계의 아킬레스 건으로 부각될 수 있음
 - 방중시 중국과 역사 연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한 측면이 있어 향후 한일 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 공안에 의한 한국 기자 폭행사건은 역대 불미스런 일로 남음

4. 한중 관계에 대한 제언

대중정책은 이제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이 현재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지는 여전히 의문임.
- 한국 사드배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고 무지한지를 잘 드러내었음. 그 대가를 오늘도 치루고 있음.
- 현재로서는 중국과 관련한 정책은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비하면서 추진해야 함. 사드 정책과 같은 수준의 정책결정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력이 감당하기 어려움.
- 최근 한중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할 이상, 과신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정치적 신뢰를 제고해야 함

중국은 대북전략이나 한반도 전략을 미중 경쟁관계의 틀로서 보려는 경향 강해질 것임

- 시진핑의 대외정책 정향을 고려할 때, 한국은 향후 더 거칠고, 야심을 숨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중국과 대면해야 함.
-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에 대한 선택의 압력이 양측으로부터 강화된 것임

With China 전략 추진

-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어려움 예상되지만, 중국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략은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세계 시장으로 다변화(diversification)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음.

한미 지역동맹화는 지양

-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호혜적 책임 전략동맹 추구하면서도 중국과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고 방향설정을 하였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지역 동맹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이는 우리의 국력 수준이나 한미동맹의 효용을 넘어서.
- 이 방침을 견지하는 것 역시 향후 우리 외교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임.

중국과 연대하면서 북핵 공조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공간 확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적극 개척해야 함.

- 북핵이나 사드에 머무르지 말고 중국의 대 전략방향과 역량을 잘 점검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대 전략 게임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가능해야 함.
-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고, 한중 전략적 관계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

사드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일시 봉합된 상황이며, 언젠든 한중 관계의 아킬레스 건으로 부각될 수 있음

방중시 중국과 역사 연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한 측면이 있어 향후 한일 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중국과 연대하면서 북핵 공조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공간 확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적극 개척해야 함.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올림픽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문제 제기

1. 문재인 정부 출범과 대중 관계 개선 추진

문재인 정부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한 주변 4강 외교의 복원을 선언하면서 중국과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할 것을 명시함.

- 전임 정부로부터 야기된 사드 갈등을 넘어 달리 중국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함
- 문 정부는 집권 즉시 연달아 '일대일로(一帶一路) 특사단', '대중국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관계 개선의 의지 전달
-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최초로 직접 전화하여 문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줌
- 남북문제에 있어서 "평화통일론", "북한붕괴 불용론"을 견지. 공존에 기반하여 '평화'와 '안정'을 더 중시하는 실용적인 태도는 중국의 입장과 크게 유사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중국과의 환황해, 환발해, 환동해 경제협력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사드문제의 경험으로 인해 '탈중국화'의 사고 역시 존재

2. 문재인 정부 초기 한중 관계의 재조정 추진

2017년 7월 6일 베를린 한중 정상회담: 동상이몽과 갈등의 격화

-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중국의 기대와 달리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림. 첫째는 한미동맹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둘째는 6월 30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및 방위협력을 추진하기로 명문화. 더구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유지"에 합의한 것은 중국에게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미일 동맹 편승으로 비춰짐.
 - 이러한 상황은 첫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를 규정하였음.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전 기대를 포기하였고, 한국 특사단과의 대화 내용과도 크게 괴리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한중 신뢰의 문제로 비약됨
- ◆ 7월 6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독일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은 비록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에 합의했다고 하나, 북중관계 인식의 차이 및 사드 문제 갈등이 더욱 부각됨
 - 시진핑은 문 대통령의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 드러내면서 사드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 규정¹⁾
 - 국내외에 시진핑은 한국 측의 양보 없이는 한중 관계 개선은 당분간 요원하고, 한중 정상회담 불가하다는 것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 가능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합의

- ◆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드문제는 일단 봉합에 합의.
 - 사드 문제가 더 이상 양국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한·중 관계 회복 및 교류·협력 정상화 의지 확인
 - 한중간 3 Nos 원칙에 공감대 형성: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MD에 편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검토하지 않는다.
 - 한국은 사드 문제의 완전 해소 희망. 중국은 잠재된 분쟁 사안으로 인식
- ◆ 한중 관계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중국의 이해 강화 요인
 -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 고조로 상호 협력 필요성 급격히 증대.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불가피하다고 봄
 - 시진핑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감과 기대치 높음
 - 한미일의 대중국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억제 기대
 - 미중 전략경쟁의 강화로 한국의 지정학적, 지전략적 가치 증대

7월 6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독일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은 비록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에 합의했다고 하나, 북중관계 인식의 차이 및 사드 문제 갈등이 더욱 부각됨

사드 문제가 더 이상 양국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한·중 관계 회복 및 교류·협력 정상화 의지 확인

한국은 사드 문제의 완전 해소 희망. 중국은 잠재된 분쟁 사안으로 인식

- ◆ 한중 관계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 강화 요인
 - 비대칭적 상호의존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마찰은 한국에 더 부담. 미래 한국의 이익개선 전망 역시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급적 갈등을 시급히 수습해야 할 필요성 존재
 - 한반도 무력 충돌의 가능성 고조되는 가운데, 전쟁 방지라는 입장 유사
 -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 공고화 및 향후 북한 사태에 대한 대중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 존재
- ◆ 한중 협력의 제약 요인(중국 입장)
 - 중국 측은 사드 문제로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크게 손상
 -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중국의 최소억제 핵전략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사안으로 인식
 - 대북핵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대중국 견제 세력화 혹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로 인식
 - 향후 사드 배치 관련 환경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허용을 공식화한다면,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점화 불가피

중국 측은 사드 문제로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크게 손상

대북핵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대중국 견제 세력화 혹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로 인식

3.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과 미완의 봉합

10월 31일 합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공식국빈 방문의 분위기 조성하였고, APEC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제2차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공식 초청 제안을 받음.

- ◆ 사드 관련 한중간의 이해 차이는 2017년 12월 14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양국은 정상회담을 상호 기대치와 격식을 낮추는 Low Key로 진행하기로 합의
 -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사안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대한 정상회담 개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양국 실용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음

사드 관련 한중간의 이해 차이는 2017년 12월 14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양국 실용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음

한중의 전략

중국	정상회담 너무 Spotlight 받지 않도록 함. 한중 관계 개선은 추진 중국의 불만 적절히 표현
한국	중국과의 갈등 최대 억제. 북한 핵 한반도 긴장완화 위한 협력 유인. 사드 관련 경제보복 해제와 미래 지향의 경제협력 추진. 중국 국민들에 최대한 친밀감+중국 지도자들에게는 신뢰감 증진

- ◆ 이번 제3차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세 가지 전제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개최
 - 양국은 Low Key로 임한다
 - 양국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 양국은 경제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성과를 거둔다.

한중의 이해와 부담

중국	부담	사드를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익이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실제 가시적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중관계 개선 추진. 시진핑의 권위 실추, 중국 외교의 실패 이미지 부각
	이익	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레드라인인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과 대혼란의 가능성 고조.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공조 필요 ② 미일이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에 한국을 이끌어 들이려는 노력 가속. 한미일 안보협력 공식화 및 강화 추진.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으로 대중국 견제전선 가시화와 한국의 참여 가능성 ③ 한중 경제협력의 필요성 여전히 존재
한국	부담	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라는 국민들의 바람 ② 중국의 압박 굴복이라는 비판과 미일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균형외교 아니냐는 의심
	이익	① 한반도 무력 충돌의 가능성 고조와 북핵 문제의 고조에 따른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② 사드 보복의 중단 ③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창출